쓰레기 더미에 묻힌 '은둔 가구' 아무도 몰랐다

참담하고…

지적장애 50대 거주 아파트 쓰레기 10여t 가득하고 악취 누울 곳 없어 노숙인 생활

비참하고…

영구임대아파트 70대 노인 며칠째 식사 못하고 쓰러져 아사 직전에 겨우 구조돼

복지사각지대 방치…지속적 관리 시스템 필요

최근 나홀로 가구가 늘면서 사회와 단절된 채 정신·지적장애 또는 우울증을 앓거나 은둔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이웃주민 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구조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고독사(孤獨死)·질병악화 등 각종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데도, 은둔생활을 하는 탓에 제때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자의 반 타의반'으로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과 별도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은둔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이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청 복지정책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한 노숙인이 북구 우산동 근린공원에서 각종 쓰레기를 쌓아둔 채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현장을 찾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노숙인이 이모(58·정신장애 3급)씨라는 것을 알고 2t 분량의 쓰레기를 치운 뒤 거주지인 북구 A영구임대아파트까지 바래다줬다.

공무원들은 이씨의 집안을 보고 깜짝 놀랐다. 거실과 연결된 현관문에서부터 각종 쓰레기가 사람 키보다 더높이 쌓여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려웠으며 건물 내부에는 사람 한 명 누울 공간도 없었다.

악취와 벌레는 물론 누군가 먹다 버린 음식물쓰레기에, 길거리에서 주워온 가구·폐지·옷·이불·의자 등이 가득 쌓여 있었다. 자신이 주워온 각종 폐품이 방안에 가득 차면서 누울 공간이 사라지자 노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홀로 사는 이씨는 도움을 주겠다는 공무원들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쓰레기를 치우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몇 시간에 걸쳐 이씨를 설득한 끝에 겨우 허락을 받아냈다.

이날 현재까지 이틀간 이씨의 집에서 나온 쓰레기의 양은 약 10t. 1t 화물차 10대 분량으로, 공무원·자원봉사자 등 12명이 동원됐다. 벽지·장판까지 새로 교체하려면 이틀 이상 더 소요된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이다.

북구는 이씨를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 돌봄서비스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일엔 북구 B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김모(71)씨가 아사(餓死) 직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최근 며칠 간 거동이 불편한 김씨가 보이지 않자 집을 찾아갔다.

방안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리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점을 이상히 여긴 직원들은 119에 신고, 문을 연 뒤 들어갔다.

김씨는 거실 벽에 기댄 채 다 쓰러져가고 있었다. 며칠 째 식사를 하지 못한 것이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4일 각 구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31일 현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한 건수는 모두 9751건. 구별로는 ▲동구 1010건 ▲서구 1827건 ▲남구 1493건 ▲북구 2466건 ▲광산구 2955건 등이다.

각 구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애쓰는데도, 정신적·신체적인 문제로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해 악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대다수는 사회적 관계나 유대가 약해지면서 고립되다가 자살 등 극단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웃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함은 물론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4일 광주시 북구 A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모(58)씨의 집에서 수거한 각종 쓰레기를 1t 화물차에 싣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건설사 무더기 기소

'제비뽑기'로 공구 분할 배정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대형건설사 법인 14곳과 해당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건설사는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삼환기업, KCC건설, 롯데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등이다.

검찰은 또 한라건설, 코오롱건설,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등 6개사를 벌금 3000만~5000만원에, 업체 관계자 7명을 1000만~3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공사 13개 공구에 입찰을 담합, 미리 정한 예정자가 낙찰을 받고 나머지 회사는 입찰에 들러리를 서준 협의를 받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사업비가 8조3500억원에 달한다. 2006년부터 추진돼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는 19개(최저가낙찰제 13개+대안·턴키 6개) 공구로 나눠서 발주됐다.

조사결과 소위 '빅7'(GS건설·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SK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삼성물산) 대형건설사의 관급공사 수주 담당 실무자 7명은 호남고속철 공구 발주 소식을 접하고 서울역 부근 GS건설 역전타워의 레스토랑에서 회합을 가졌다.

이들은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줄이고 각 건설사가 골고루 보다 손쉽게 낙찰을 받도록 하자'며 뜻을 모았다.

이들은 국내 건설사 21곳을 선정해 A·B·C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에 공구를 4~5개씩 배정하고 추첨을 통해 공구를 분할 배정했다. /연합뉴스

회사 도산 안해도 밀린 임금 3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강제집행권만 확보하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자는 물론 재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는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체당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체당금은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을 인정한 경우에만 지급됐다.

이 때문에 체불 근로자 10명 중 8명은 퇴직해도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당금을 받지 못했다. 대부분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급여청구권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체불 임금을 받아낼 길이 없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법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더라도 퇴직 근로자가 강제집행권한을 법원에서 받게 되면 정부가 밀린 임금을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4만 1000명의 근로자들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매출·생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해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5000만원까지 빌려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적용대상도 퇴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의 체불 임금으로까지 확대됐다. /연합뉴스

어쭙잖은 검찰?

법원 "불명확한 증거" 잇단 무죄 판결…"무리한 기소" 지적도

검찰이 공소(公訴·재판 회부) 제기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가 잇따르면서 검찰의 공소 유지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감안하면 애초 검찰 수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서경환)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특가법 절도)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한 것으로 유죄로 판단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A씨가 상습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기존 범행 수법과 일치하지 않는데다, A씨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 차량에서 A씨 DNA가 검출된 박카스병이 발견됐지만 간접 증거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논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33)씨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면 명확한 증거로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피해발생 시기와 범행 일시가 일치하지 않는 등 합리적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모 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장용기)도 저온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근로자를 고용해 작업을 진행하다 근로자가 떨어져 사망하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냉동설비업자 C(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공소 제기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검사가 폭행 혐의를 적용해 제기한 D(50)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잇따른 무죄 판결이 자칫 무리한 기소 때문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 스스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갖추는 등 공소 유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노숙자 명의 낙찰받고 한우 29마리 챙겨 달아난 사기단 덜미

쌍나팔

○…한우 경매시장에서 노숙자 명의로 낙찰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만 챙겨 달아난 5인조 사기단이 경찰에 덜미.

○…4일 보성경찰에 따르면 문모(30)씨 등 5명은 지난 9월 27일 오전 7시께 보성군 회천면 축협 한우 경매시장에서 대금 3500만 원을 건네지 않고 낙찰받은 소 9마리만 챙겨 줄행랑치는 등 최근까지 전남지역 가축시장을 돌며 한우 29마리(1억 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

○…교도소 동기인 이들 사기단은 노숙자 변모(33)씨의 명의로 소를 낙찰받아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농가에 팔아치우다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이들은 "경매 절차가 신원만 대충 확인하고 대금도 당일까지 입금하는 방식이라서 예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진술.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부동산 경매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협의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투자자 모심
• 1억원 이상
• 담보 제공 가능
• 경매에 관심 있는 분!

월산동 "근린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반지하-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35평, 주택
4층-35평, 주택
■ 시세 및 감정가 -7억2천만원
■ 일시불 매매가 - 6억2천만원
(보 2억에 월270만원 포함)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전체올수리
■ 주인 직매 HP. 010-3605-5000

■ 29평 -12층
주거겸 사무실
양동 하천 방향, 원룸
화장실 주방 등 전체 올수리
시 세-1억원 정도
매매가-7000만원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

오피스텔 매매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77평형-20층
사무실 전용
창가코너, 최상층, 전망좋음
사무실 용도로 전체 올수리
룸 2개 사무실 1개
시 세-3억5000만원
매매가-2억7000만원

문의 HP. 010-3180-8900